

세수호황 마감 속 520兆 슈퍼예산 논란... 여야 '긱간싸움'

역대 최대 예산 편성에 기초 고수 내주 당정 협의 거쳐 예산안 발표

기업 덕에 이어졌던 '세수호황'도 올해를 기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다는 기초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수입은 줄고, 지출 폭은 커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쓴 만큼 벌 수 있을지 의문이란 우려가 정치권을 감싸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10조~520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8.6~10.7%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초 확정된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도 최소 7.3%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이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로 점차 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 확장은 역대급이다.

여권은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경기 부진을 이유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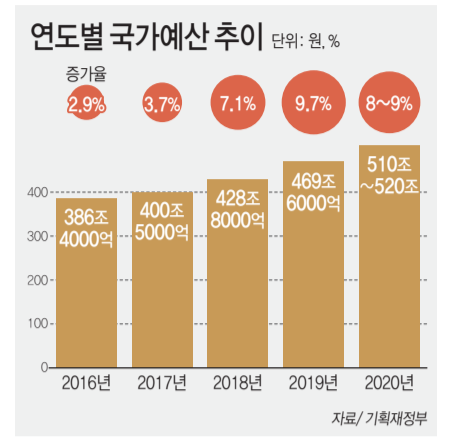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세번째)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 재정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내각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등을 위해 선 재정 확장이 절실하단 의견이다. 하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는 실정을 고려하면 내년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앞서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발표하며 올해를 기점으로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늘었던 법인세 실적이 줄면서 내년부터는 전반적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세입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국세는 15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수입이 큰 폭 늘어나지 않으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도 역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합한 내년 재정수입 규모가 50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 중인 510조원대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적자인 셈이다.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번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

과하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3년 연속 5%를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예년 수준으로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당초 내년 예산을 530조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1명 구성을 완료하면서 당정(여당·정부)은 다음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



재 결산에 들어간 국회는 이번 달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는 다음주 당정 발표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학계는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어떤 준칙이 필요한가가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내년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산업 4.7조 투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혁신성장 2030 전략 투자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에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위해 6대 분야에 올해보다 45% (1조5000억원) 늘어난 총 4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AI(인공지능) 등 'D.N.A'라 명명한 3대 분야에 1조7000억원을,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주요 추진 과제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 '데이터·AI'에 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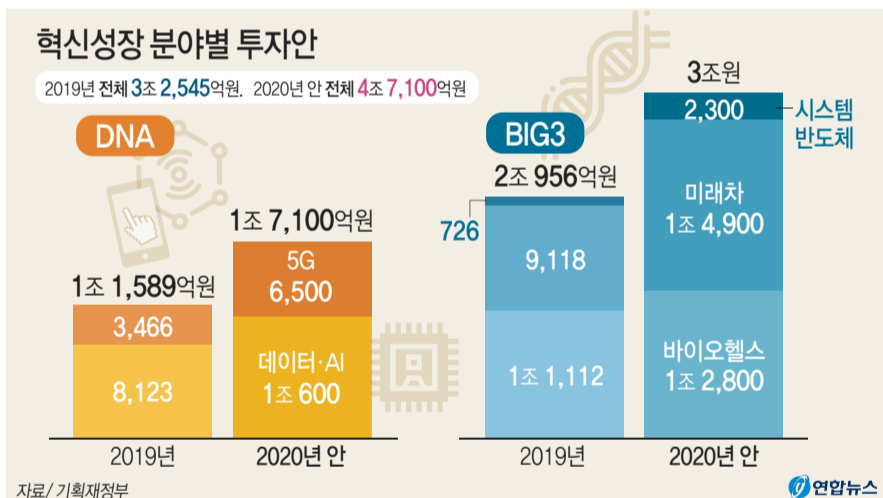
정부는 데이터·AI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고 판단, 내년에 올해보다 31% (2500억원) 많은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 추진에 72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계검색 멘토링, 문화정보 큐레이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가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인맞춤형 국민서비스 도입 등 신규 사업으로 민원·행정도 고도화한다.

AI 학습용 정보,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가 신성장의 기반인 분야 등에서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전체의 34%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술개발 확대, 인재 육성 등 AI 혁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신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90% 늘어난 19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도입하고, AI·데이터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에 2300억

정부는 '미래 먹거리'로 시장 선점이 중요한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까지 이른바 '빅3 신산업'에 내년 3조원을 투자한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빅3 신산업'을 집중 육성

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에는 올해보다 229% (1600억원) 늘어난 2300억원을 투입, 핵심 기술 개발로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의 협력 기반을 조성해 반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유망 분야 관련 기술 위주로 시스템반도체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 공공 나노랩 등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 핵심 IP(지식재산) 개발·보급 등 반도체 개발의 전(全)주기를 지원한다.

사무공간,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팹리스 설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의료의 바탕이 되는 의료데이터 축적을 지속하고, 신약·의료기기, 헬스케어·질병 치료 선진화를 지원하는 데 투자를 집중한다.

AI 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공동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석대성 기자

정부·유관기관 힘모아 中 小수출 총력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회 중소기업 해외 진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중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두루 참여했다.

또 협의회에선 코트라 특별일반포괄허가(ICP)기업 활용확대 방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체수입처 발굴 특별보험, 중진공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기관별로 다양한 일본수출 규제 대응 방안이 나왔다.

부산과 대전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선 유관기관의 비상대응반(중진공, 수

은, 기·신보 등)은 물론 지자체의 비상 대응체제와 연결하는 '통합수출신고대응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신속하고 종합적인 피해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수출위기 대응 및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무역상사인 아이마켓코리아가 협업해 최초로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수입 원·부자재 구입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참여기업에게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연계해 구매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페이 서비스 넘어 비트코인 기능까지 확대

>> 1면 '삼성페이 뜨자...'서 계속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MST 기술 사용을 밝혀왔는데도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삼성페이가 성공했다는 반증아니겠냐"며 "양사 기술이 다소 달라서 다 이내믹스가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LG페이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효과는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이 서비스뿐 아니다. 스마트폰 업계는 비트코인 지갑 기능을 단말기에 확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10부터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고 있으며, LG전자도 '쌍유 월렛'이라는 상표를 출시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지난해부터 마곡 본사에서 '마곡 커뮤니티 화폐'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만일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